李 "10년 뒤 먹거리 준비해야"… 7대 SEED 조기 성과 주문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 필요성 강조
"올해 경제성장률·수출 등 성과"
민간 협력 확대·규제 혁신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7대 SEED(시드) 프로젝트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수출·국민소득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후 10~20년을 책임질 먹거리를 준비하는 작업은 아직 더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착공식이 진행되는 등 나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8월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내놓은 구상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혁신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핵심 광물·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경쟁 무대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 두 영역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기술,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경쟁에서 오늘의 한 걸음 차이는 훗날 100걸음, 또 1000걸음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신발과 의류 중심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또다시 IT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끊임없이 고도화했던 것처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양대 핵심 축이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세우고, 기획·투자·연구개발·실증 전반에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규제 혁신과 금융·조세 지원, 핵심 인재 육성 역시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마주할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리는 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등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변수와 위기가 안팎에서 불거졌는데, 국민들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그리고 수출, 국민소득 등 핵심 경제 지표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은 경제, 산업, 외교,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진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말을 맞아 국정과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연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정과제 그리고 정책의 추진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이행이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사업 속도를 배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올해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국민 체감 최우선' 원칙 아래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시간은 5200만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값진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재정 댐" vs 국민의힘 "미래파탄"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서 예산 심사
이연희 "채무 상환·미래 투자 병행"
나경원 "여유 자금은 채무 상환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 앞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려면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기금 신설에 반대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련 법안 의결을 기다려 왔지만, 재경위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법안 처리와 별도로 기금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댐'에 비유하며 세수가 늘 때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초과 세수와 세수 부족을 잇달아 겪으면서 단년도 예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무를 상환하면서 일부는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올해 162조원, 내년에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보강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제 입장은 미래대응기금 폐기"라며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 나랏빚을 내 기금을 조성하면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미래파탄기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조작기소 특검 후보에 이임성·이정훈 추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각 후보 지명
국힘, '정치적 수단' 반발하며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조작기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한인 26일 각각 이임성·이정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로 이임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이임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을 각각 두 차례 맡았다. 현재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변호사에 대해 "수사 현장을 직접 경험한 법조인"이라며 "법조계 안팎에서 쌓아 온 두터운 신망과 균형 감각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검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검이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정훈 변호사를 이번 특검으로 추천했다. 혁신당은 "이정훈 변호사의 오랜 법관 경력과 전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특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정훈 변호사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혁신당은 이 변호사가 국가권력 행사의 적정성과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재판 경험을 폭넓게 갖췄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번 특별검사의 책무는 국가형벌권이 헌법과 법률이 수여한 본연의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수사와 기소의 과정에서 사실 왜곡과 증거 조작, 권한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는 예단에서 출발해서도,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도 안 된다"며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추천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기 도박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옥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 은닉을 위해서 급조된 공소 취소용 떴다방"이라며 "특검 후보자들이 이러한 파렴치한 재판 부정행위의 공범이 되고자 한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美 관세 압박에 정부 "한미 합의 유지돼야"

›› 1면 '對美 관세 15%'서 계속

정부는 미국이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때 한미 관세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는 USTR 발표 전 미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양국 무역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아너 더 딜(honor the deal)'이라는 표현을 쓰며 최종적으로 한국에 적용될 관세는 한미 관세협의를 존중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이 약속한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담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최종 관세도 합의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이 제시한 25% 상향 가능성이 실제 관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USTR이 한국의 산업정책을 과잉생산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USTR은 제조업 유지·확대를 위한 산업·업종별 계획과 국책은행의 우대금 등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관련 정책도 조사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산업정책이 시장과 기업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기업의 핵심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제조업이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적 공급과잉과는 다르며, 오히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USTR은 내년 1월 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1월 25일부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과거 301조 조사에서도 최초 제안과 최종 조치 사이에 관세율 완화·강화나 적용 유예 등 변화가 있었던 만큼 업계와 학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며 최종 관세 결정 때까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